지나친 대출금리 인상 제동…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경감

최종구 "금융인 우월의식 고쳐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

대출금리 체계 합리성 점검 강화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도 마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 후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금융혁신 추진방향'은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에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금융권 적폐'로 지적돼 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성과보수 등을 손보는 동시에 서민금융은 카드수수료 인하 등 포용적 금융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만약 금융인 중에 '금융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고 어떠한 경우에도 간섭 받아서는 안 된다'는 식의 잘못된 우월의식에 젖어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생각을 고쳐달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실태점검 후 결과 등을 감안해 마련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는 CEO(최고경영자) 후보군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을 공시하고, 후보군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 영향력을 제외하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주주 기준도 완화한다.

금융사의 보수공시도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고액성과급 수령자에 대한 개별보수 공시 등 보다 엄격한 보수 공시기준을 마련토록 한다.

〈금융혁신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현황 및 문제점	금융혁신 추진 전략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1 금융부문 쇄신 → 금융 신뢰 회복
	❶ 금융당국 혁신 :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행정 추진
	❷ 금융업권 쇄신 : 채용비리 등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하게 쇄신
	❸ 금융분야 경제민주주의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 미흡	2 생산적 금융 → 혁신성장 지원
	❹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 기업 성장단계별 금융의 역할 강화
	❺ 금융 본연의 기능 강화 : 생산적분야로의 자금중개 확대
서민지원·소비자보호 강화 필요성 증대	3 포용적 금융 → 서민·소비자 보호 강화
	❻ 서민·취약차주 지원 : 서민의 자금애로 해소 및 금융부담 완화
	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제도 정비
	❽ 사회적금융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금융시장 내 건전한 경쟁 부족	4 경쟁촉진 → 국민 금융편익 제고
	❾ 인가 개편 : 금융분야內 새로운 혁신 도전자 출현 촉진
	❿ 핀테크 활성화 : 혁신적 금융서비스 출시 유도
	⓫ 금융규제 혁신 :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및 외연 확대 지원

/자료=금융위원회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엔 제동을 건다. 금감원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이 과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체계 합리성 점검을 강화해 연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중개를 확대하기 위해 자본규제도 손본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가계·부동산 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기업금융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BIS(자기자본비율)규제·예대율(대출금/예수금) 등을 개편한다.

이와 함께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등이 담긴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을 오는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하는 동시에 서민·소비자 보호는 강화한다.

당국은 이달 중 편의점·슈퍼·제과점 등 소액결제업종의 소매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수수료 경감방안을 마련,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다. 상반기엔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조정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1분기 중 발표될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추가 과제'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ATM(현금자동입출금기)·외화환전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저소득층 대상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유도 등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도 마련한다.

신용대출·카드사용 등 금융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CB(신용조회)사 신용등급의 정확성·공정성도 높인다. 가령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 신용정보의 활용을 확대해 청년층 등 금융정보 부족자의 평가상 불이익을 완화하는 식의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종사자가 절박한 마음을 갖고 그동안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이뤄졌던 금융적폐를 적극적으로 청산하는 한편 서민층, 영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 등 국민 생활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금융위, 차명계좌·은산분리 등 4대 쟁점 '보류'

혁신위원들과 긴밀히 협의
관련부처 의견 감안해 마련

금융당국은 15일 금융혁신 방안을 내놓으면서 차명계좌와 은산분리, 근로자 추천이사제, 키코(KIKO) 등 4대 쟁점은 여전히 '보류' 방침을 고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즉시 추진하기 어려운 권고안에 대해선 금융행정 혁신위원회 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실명제와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사례와 같이 관련부처 의견도 감안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당장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꼽은 사안은 4가지다.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와 은산분리, 근로자 추천이사제, 키코 사태 재조사 등이다.

당초 혁신위의 권고안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권고안이 나온 다음날 바로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던 데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차명계좌와 은산분리의 경우 국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며, 근로자 추천이사제도는 최 위원장이 사회적 합의를 거론했던 만큼 역시 진전은 더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서는 금융위가 지난 2일 법제처에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에 의해 실명전환하거나 실명확인한 경우에 1993년 긴급명령 및 현행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논란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키코 피해기업들의 경우 혁신위 권고안에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만 하게 된 사례다. 키코 피해 기업과 법률전문가들은 지난해 말부터 연달아 전략회의 등을 열고 금융위가 재조사 권고를 사실상 거부한 것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4가지 쟁점을 제외한 권고사항은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나머지 73개 권고안은 최대한 수용해 금융위 안건·의사록 공개, 불공정 영업에 대한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에 대해 이달 중 조속히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급성 인플루엔자 A형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인플루엔자 A형 감염 환자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평가하기 위함

자격 요건
-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 시험 약 투여 전 48시간 이내 질환 발병한 대상자(체온이 ≥38.0℃ 또는 호흡기 및 전신 증상 발병 대상자)
- 참여불가:
  - 인플루엔자로 항바이러스 치료 또는 연구 참여 전 14일 이내 항바이러스제 투약력이 있는 자
  - 연구 참여 전 21일 이내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자
  - 현재 B,C형 간염 또는 HIV 감염 대상자

연구 절차
- 선별검사 후 평가하여 최종 선정.
- 본 연구에 등록 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체치료제 1회 투여 및 채혈 등의 기본 검사 진행.
- 약 110일의 기간 동안 7-10회의 방문 (상황에 따라 3일간 입원도 가능함)

참여 혜택
- 임상시험 기간 동안 전문 교수진의 집중적 진료 및 관리
- 임상시험의 모든 검사비용(혈액검사, 뇨검사 등) 및 임상시험용 의약품
- 입원비 및 소정의 교통비 등

실시 기관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건국대학교 병원, 고대안암병원,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 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평촌한림대 성심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한림대 춘천 성심병원, 건양대학교 병원, 전남대학교 병원, 영남대학교 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외 21개 기관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콜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1800-6883

※ 임상시험 참여로 인해 불편사항이 발생하거나, 위험(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